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25년 11월 5일

보고서 제출자 : 김 명 호

(사)통일문제연구원

제1장 연구 개요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는 북한의 도발과 정부의 강경한 원칙적 대북정책의 기초 속에서 대화보다 군사적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므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으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비판도 존재하였다. 반면,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과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의지를 바탕으로 원칙을 강조하며, 통일 역량 강화에 주력하였다.¹⁾

윤석열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 기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원칙 있는 대북정책 :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강조하며, 북한의 행동 변화에 따른 단계적 접근 추구
- ② 힘에 의한 평화 :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역지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를 강조하며, 대화보다는 군사적 대비를 중시
- ③ 북한 인권 증진 :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증진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며, 3.1 운동 정신과 연결하여 통일 담론을 모색
- ④ 자유민주주의 통일 :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한 평화통일을 목표로 하며, 통일 역량 강화

그러나 북한은 지난 2018년 4월 약속했던 핵·미사일 유예조치의 파기를 시사한 이후, 지속적으로 도발을 감행하였다. 2022년 5월, 윤석열 출범 이후,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의 정상 각도 발사 등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방사포 등 도발의 횟수와 강도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한·미 해상연합훈련 및 한·미·일 해상연합훈련 실시와 관련하여, 각종 미사일 발사와 전투기의 위협 비행,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동해와 서해 포격 도발 등 전례 없는 연쇄도발을 감행하였다.²⁾ 2024년도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도발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NLL 북방 일대 영역에 포탄 200여 발 발사 : 합동참모본부는 2024년 1월 5일 오후 1시 30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백령도 북쪽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쪽 등산곶 일대에서 09시부터 11시까지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하였고, 서해 북방한계선 완충구역에 탄착되었다고 발표하였다.

1) 김영호 통일부 장관, 윤석열 정부 2년,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쉽 없이 달려온 정부, 2024년 5월 31일, 통일부.

2) 고재홍, "김정은 집권기 대남도발 행태 및 의도 분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전략보고서, No.205, 2022, pp.1-12.

- ②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 북한은 2024년 1월 14일 14시 55분 경, 평양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 ③ 대한민국에 오물 살포 : 2024년 5월 28일부터 북한이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 영토를 향하여 오물을 적재한 풍선을 무단으로 살포하였다.
- ④ 경의선과 동해선 폭파 : 2024년 10월 15일, 북한이 군사분계선 북쪽에 있는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 선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였다.³⁾

이에 대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남북 갈등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였다. 문 전 대통령은 9월 19일 오전, 전남 목포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 온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같은 더불어 민주당 출신으로, 2025년 5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복원을 최우선 대북정책으로 내걸었으나, 북한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남북관계는 사실상 단절된 상태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⁵⁾

- ① 평화 공존과 실용주의 : 이 대통령은 안보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실용주의적 접근 제시
- ② 대화 채널 복원 :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연락 채널을 복구하고, 사실상 폐기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추진
- ③ 선제적 조치 : 북한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등 선제적 유화 조치들을 시행
- ④ 국제 공조 :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특히 중국과 북한의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한 대북 관여를 모색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현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① 대화 거부 : 북한은 이재명 정부의 대화 제의와 유화적 제스처에 "흥미가 없다",

3)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B6%81%ED%95%9C/%EB%8C%80%EB%82%A8%20%EB%8F%84%EB%B0%9C#s-4.13.3>, 2025년 10월 20일.

4) 서울신문, "역대 정부 노력 물거품 만들어"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작심비판한 문재인 전 대통령, 2024년 9월 20일.

5) BBC, '한반도 평화 구축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대북 관계 어떻게 달라질까, 2025년 6월 5일, <https://www.bbc.com/korean>

"마주 앉을 일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며 대화를 단호히 거부

- ② '두 국가' 관계 규정 : 북한은 남북관계를 '동족'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난 '조선(북한)과 한국'의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
- ③ 미사일 도발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를 이어감
- ④ 현실적 어려움 : 정부는 북한이 단시일 내에 호응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 남북관계는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⁶⁾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현재 남북관계는 경색된 상태이며, 관계 복원에는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⁷⁾

이와 같이 정권을 장악한 정당의 특성에 따라 대북정책이 크게 달라지는 지금의 현실을 볼 때,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그러므로 어려운 한반도의 정세 속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는 강원도 및 경기도의 대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남북통일 정책' 및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내용은 ① '응답자의 인적사항', ② '통일 정책 문제', ③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정책'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SPSS V.19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설문에 답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대해서는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북한에 대한 생각', '통일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북정책', '통일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대상' 등은 3개의 답변이 가능한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강원도 및 경기도의 대학생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446부의 설문지 가운데 인적사항에 대한 답이 없거나 설문항목에 대하여 불성실한 답을 한 6부를 제외하고, 440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6) YTN, "북, 남 대북정책에 촉각...단시일 내 호응 가능성은 작아" 2025년 9월 2일.

7) KBS, "한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북, 이재명 정부에 첫 공식 입장, 2025년 7월 28일. (21:21), <https://news.kbs.co.kr/news>

제2장 기초연구

[A. 인적사항]

1. 성별

설문지에 답한 응답자(440명) 가운데 ‘남자’가 261명(59.3%), ‘여자’가 179명(40.7%)으로 나타났다.

<표 1-1> 성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남자	261	59.3	59.3	59.3
	여자	179	40.7	40.7	100.0
	합계	440	100.0	100.0	

2. 나이

설문지에 답한 응답자들의 나이는 ① ‘20세 이하’ 35명(8.0%), ② ‘21-30세’ 153명(34.8%), ③ ‘31-40세’ 37명(8.4%), ④ ‘41-50세’ 66명(15.0%), ⑤ ‘51-60세’ 69명(15.7%), ⑥ ‘61세 이상’ 80명(18.2%)으로 나타났다.

<표 1-2> 나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0세 이하	35	8.0	8.0	8.0
	21-30세	153	34.8	34.8	42.7
	31-40세	37	8.4	8.4	51.1
	41-50세	66	15.0	15.0	66.1
	51-60세	69	15.7	15.7	81.8
	61세 이상	80	18.2	18.2	100.0
	합계	440	100.0	100.0	

3. 직업

설문지에 답한 응답자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① ‘대학 1학년’ 37명(8.4%), ② ‘대학 2학년’ 71명(16.1%), ③ ‘대학 3학년’ 44명(10.0%), ④ ‘대학 4학년’ 27명(6.1%), ⑤ ‘일반인’ 261명(59.3%)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보다 일반인의 참여 비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직업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대학 1학년	37	8.4	8.4	8.4
	대학 2학년	71	16.1	16.1	24.5
	대학 3학년	44	10.0	10.0	34.5
	대학 4학년	27	6.1	6.1	40.7
	일반인	261	59.3	59.3	100.0
	합계	440	100.0	100.0	

[B. 통일 정책 문제]

1.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① ‘반드시 통일돼야 한다’ 115명(26.1%), ② ‘조금 필요하다’ 87명(19.8%), ③ ‘보통이다’ 90명(20.5%), ④ ‘아직 시기상조다’ 111명(25.2%), ⑤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37명(8.4%)으로 나타났다.

2024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2.8%가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보다 조금 많은 응답자인 66.4%가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통일의 필요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반드시 통일돼야 한다	115	26.1	26.1	26.1
조금 필요하다	87	19.8	19.8	45.9
보통이다	90	20.5	20.5	66.4
아직 시기상조다	111	25.2	25.2	91.6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37	8.4	8.4	100.0
합계	440	100.0	100.0	

2. 통일에 대한 이익 정도

통일이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의 이익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① ‘이익이 매우 클 것이다’ 124명(28.2%), ② ‘이익이 조금 있을 것이다’ 155명(35.2%), ③ ‘이익이 거의 없을 것이다’ 71명(16.1%), ④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90명(20.5%) 등으로 나타났다. 즉, 질문에 답한 응답자들의 63.4%가 통일이 대한민국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통일에 대한 이익 정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이익이 매우 클 것이다	124	28.2	28.2	28.2
이익이 조금 있을 것이다	155	35.2	35.2	63.4
이익이 거의 없을 것이다	71	16.1	16.1	79.5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90	20.5	20.5	100.0
합계	440	100.0	100.0	

3. 남북한 통일의 가능성

남북한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① ‘100% 가능하다’ 46명(10.5%), ② ‘50% 정도 가능하다’ 62명(14.2%), ③ ‘20~30% 정도 가능하다’ 145명(33.1%), ④ ‘불가능하다’ 117명(26.7%), ⑤ ‘모르겠다’ 68명(15.5%)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57.8%가 남북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2024년도의 설문조사에서 남북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64.3%에 비하여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남북한 통일의 가능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00% 가능하다	46	10.5	10.5	10.5
	50% 정도 가능하다	62	14.1	14.2	24.7
	20~30% 정도 가능하다	145	33.0	33.1	57.8
	불가능하다	117	26.6	26.7	84.5
	모르겠다	68	15.5	15.5	100.0
합계	438	99.5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5		
합계		440	100.0		

4. 남북통일의 시기적인 전망

남북통일의 시기적인 전망에 대하여 ① ‘아주 빠를 것이다’ 11명(2.5%), ② ‘조금 빠를 것이다’ 35명(8.0%), ③ ‘조금 늦을 것이다’ 146명(33.3%), ④ ‘아주 늦을 것이다’ 175명(39.9%), ⑤ ‘불가능할 것이다’ 72명(16.4%)으로 나타났다. 즉, 남북통일이 불가능하거나 늦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의 비중이 89.5%로, 2024년의 결과치인 91.7%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남북통일의 시기적인 전망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아주 빠를 것이다	11	2.5	2.5	2.5
	조금 빠를 것이다	35	8.0	8.0	10.5
	조금 늦을 것이다	146	33.2	33.3	43.7
	아주 늦을 것이다	175	39.8	39.9	83.6
	불가능할 것이다	72	16.4	16.4	100.0
합계	439	99.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		
합계		440	100.0		

5.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도

국가안보에 대한 귀하의 관심도는 ① ‘관심이 아주 많다’ 112명(25.5%), ② ‘관심이 조금 많다’ 132명(30.0%), ③ ‘보통이다’ 152명(34.5%), ④ ‘관심이 조금 없다’ 33명(7.5%), ⑤ ‘관심이 아주 없다’ 7명(1.6%), ⑥ ‘모르겠다’ 4명(0.9%)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90%가 국가안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관심이 아주 많다	112	25.5	25.5	25.5
	관심이 조금 많다	132	30.0	30.0	55.5
	보통이다	152	34.5	34.5	90.0
	관심이 조금 없다	33	7.5	7.5	97.5
	관심이 아주 없다	7	1.6	1.6	99.1
	모르겠다	4	.9	.9	100.0
합계	440	100.0	100.0		

6. 통일방식에 대한 생각

통일방식에 대한 생각은 ① ‘가급적 빠른 통합’ 85명(19.3%), ② ‘평화체제를 유지하면서 남북한 별개의 국가로 존속’ 279명(63.4%), ③ ‘현 체제 유지’ 76명(17.3%)으로 나타났다.

<표 2-6> 통일방식에 대한 생각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가급적 빠른 통합	85	19.3	19.3	19.3
	평화체제유지와 별개국가로 존속	279	63.4	63.4	82.7
	현 체제 유지	76	17.3	17.3	100.0
	합계	440	100.0	100.0	

7.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협력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관계는 ① ‘한미 간 협력’ 105명(24.0%), ② ‘북미 간 협력’ 9명(2.1%), ③ ‘한중 간 협력’ 29명(6.6%), ④ ‘한일 간 협력’ 2명(0.5%), ⑤ ‘한미일 간 협력’ 89명(20.3%), ⑥ ‘한미북 간 협력’ 204명(46.6%)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의 협력관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가장 중요한 협력관계임을 나타내었다.

<표 2-7>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협력관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한미 간 협력	105	23.9	24.0	24.0
	북미 간 협력	9	2.0	2.1	26.0
	한중 간 협력	29	6.6	6.6	32.6
	한일 간 협력	2	.5	.5	33.1
	한미일 간 협력	89	20.2	20.3	53.4
	한미북 간 협력	204	46.4	46.6	100.0
	합계	438	99.5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5		
	합계	440	100.0		

8. 최우선적 정부의 대북정책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부의 대북정책으로는 ① ‘북한의 비핵화 조치’ 148명(33.8%), ② ‘평화협정 체결’ 116명(26.5%), ③ ‘남북 간 경제협력’ 47명(10.7%), ④ ‘북한의 개혁·개방’ 92명(21.0%), ⑤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 28명(6.4%) 등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조치가 우선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최우선적 정부의 대북정책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북한의 비핵화 조치	148	33.6	33.8	33.8
	평화협정 체결	116	26.4	26.5	60.3
	남북 간 경제협력	47	10.7	10.7	71.0
	북한의 개혁 개방	92	20.9	21.0	92.0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	28	6.4	6.4	98.4
	기타	7	1.6	1.6	100.0
	합계	438	99.5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5		
합계		440	100.0		

9. 국가 안보상황에 대한 전망

국가 안보상황에 대한 응답자들의 전망은 ① ‘크게 개선될 것이다’ 37명(8.4%), ② ‘조금 개선될 것이다’ 108명(24.5%), ③ ‘지금과 같이 유지될 것이다’ 174명(39.5%), ④ ‘조금 악화될 것이다’ 78명(17.7%), ⑤ ‘아주 악화될 것이다’ 43명(9.8%)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 가운데 33.0%는 국가 안보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표 2-9> 국가 안보상황에 대한 전망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크게 개선될 것이다	37	8.4	8.4	8.4
	조금 개선될 것이다	108	24.5	24.5	33.0
	지금과 같이 유지될 것이다	174	39.5	39.5	72.5
	조금 악화될 것이다	78	17.7	17.7	90.2
	아주 악화될 것이다	43	9.8	9.8	100.0
	합계	440	100.0	100.0	

10.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응답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아주 잘하고 있다’ 23명(5.2%), ② ‘조금 잘하고 있다’ 65명(14.8%), ③ ‘보통이다’ 214명(48.6%), ④ ‘조금 못하고 있다’ 57명(13.0%), ⑤ ‘아주 못하고 있다’ 81명(18.4%)으로 나타났다. 즉, 68.6%가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아주 잘하고 있다	23	5.2	5.2	5.2
	조금 잘하고 있다	65	14.8	14.8	20.0
	보통이다	214	48.6	48.6	68.6
	조금 못하고 있다	57	13.0	13.0	81.6
	아주 못하고 있다	81	18.4	18.4	100.0
	합계	440	100.0	100.0	

[C.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정책]

1. 북한과 대한민국의 민족성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성에 대하여 ① ‘북한과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244명(55.5%), ② ‘이제는 같은 민족이 아니다’ 119명(27.0%), ③ ‘모르겠다’ 77명(17.5%)으로 나타났다. ‘같은 민족이 아니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을 하여 분단의 세월이 우리들의 사고를 바꾸어 놓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응답자의 55.5%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며, 2024년의 결과치 53.0%와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표 3-1> 북한과 대한민국의 민족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북한과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244	55.5	55.5	55.5
이제는 같은 민족이 아니다	119	27.0	27.0	82.5
모르겠다	77	17.5	17.5	100.0
합계	440	100.0	100.0	

2. 북한에 대한 생각

북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1차적으로는 ‘①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다’가 308명(70.6%)을 차지하여, 2024년의 결과치인 71.2%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많은 응답자들이 긴박한 남북관계를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 북한에 대한 생각 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다	308	70.0	70.6	70.6
협력의 대상이다	82	18.6	18.8	89.4
통일의 대상이다	32	7.3	7.3	96.8
경계의 대상이다	12	2.7	2.8	99.5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1	.2	.2	99.8
우리의 적이다	1	.2	.2	100.0
합계	436	99.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9		
합계	440	100.0		

그리고 응답자들이 2차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은 ‘② 협력의 대상이다’ 137명(32.2%)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의 36.4% 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표 3-3> 북한에 대한 생각 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다	7	1.6	1.6	1.6
	협력의 대상이다	137	31.1	32.2	33.8
	통일의 대상이다	131	29.8	30.8	64.6
	경계의 대상이다	130	29.5	30.5	95.1
	도움의 대상이다	16	3.6	3.8	98.8
	우리의 적이다	5	1.1	1.2	100.0
	합계	426	96.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4	3.2		
합계		440	100.0		

그리고 응답자들이 3차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은 ‘④ 경계의 대상이다’가 100명 (23.1%)으로, 2024년의 ‘④ 경계의 대상이다’ (28.1%)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표 3-4> 북한에 대한 생각 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다	10	2.3	2.3	2.3
	협력의 대상이다	8	1.8	1.9	4.2
	통일의 대상이다	90	20.5	20.8	25.0
	경계의 대상이다	100	22.7	23.1	48.1
	도움의 대상이다	79	18.0	18.3	66.4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25	5.7	5.8	72.2
	우리의 적이다	120	27.3	27.8	100.0
	합계	432	98.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8	1.8		
합계		440	100.0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며, 한편으로 ‘협력의 대상’이고, 동시에 ‘경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김정은 정권에 대한 호감도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호감도에 대하여 ① ‘아주 좋다’ 1명(0.2%), ② ‘조금 좋다’ 0명(0.0%), ③ ‘보통이다’ 68명(15.5%), ④ ‘조금 안좋다’ 103명(23.4%), ⑤ ‘아주 안좋다’ 268명(60.9%)으로 나타났다. 즉, 부정적인 평가는 84.3%로 나타났다.

2024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87.6%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2025년도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3-5> 김정은 정권에 대한 호감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아주 좋다	1	.2	.2	.2
	보통이다	68	15.5	15.5	15.7
	조금 안좋다	103	23.4	23.4	39.1
	아주 안좋다	268	60.9	60.9	100.0
	합계	440	100.0	100.0	

4. 북한의 향후 변화 가능성

북한의 향후 변화 가능성에 대하여 ① ‘적극적으로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다’ 19명(4.3%), ② ‘소극적으로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다’ 112명(25.6%), ③ ‘개혁·개방을 하지 않을 것이다’ 241명(55.0%) , ④ ‘모르겠다’ 66명(15.1%)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29.9%는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결과치는 2024년의 결과치인 29.1%와 비교하면, 비슷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3-6> 북한의 향후 변화 가능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적극적으로 개혁 개방에 나설 것이다	19	4.3	4.3	4.3
소극적으로 개혁 개방에 나설 것이다	112	25.5	25.6	29.9
개혁 개방을 하지 않을 것이다	241	54.8	55.0	84.9
모르겠다	66	15.0	15.1	100.0
합계	438	99.5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5		
합계	440	100.0		

5.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 가능성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 가능성에 대하여 ① ‘100% 포기할 것이다’ 8명(1.8%), ② ‘50% 정도 가능하다’ 19명(4.3%), ③ ‘포기하는 척만 할 것이다’ 139명(31.6%), ④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43명(55.2%), ⑤ ‘모르겠다’ 31명(7.0%)으로 나타났다.

2024년 결과치와 비교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86.8%)와 2025년의 결과치 86.8%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많은 국민들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도를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7>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 가능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00% 포기할 것이다	8	1.8	1.8	1.8
50% 정도 가능하다	19	4.3	4.3	6.1
포기하는 척만 할 것이다	139	31.6	31.6	37.7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43	55.2	55.2	93.0
모르겠다	31	7.0	7.0	100.0
합계	440	100.0	100.0	

6.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

북핵 문제 해결의 기대감에 대하여 ① ‘100% 가능하다’ 14명(3.2%), ② ‘50% 정도 가능하다’ 33명(7.5%), ③ ‘조금 어렵다’ 226명(51.4%), ④ ‘절대 불가능하다’ 131명(29.8%), ⑤ ‘모르겠다’ 36명(8.2%)으로 나타났다. 즉, 북핵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10.7%로 나타나 북핵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81.2%)에 비하여 월등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치는 2024년의 핵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응답자(83.9%)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표 3-8> 북핵 문제 해결의 기대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00% 가능하다	14	3.2	3.2	3.2
50% 정도 가능하다	33	7.5	7.5	10.7
조금 어렵다	226	51.4	51.4	62.0
절대 불가능하다	131	29.8	29.8	91.8
모르겠다	36	8.2	8.2	100.0
합계	440	100.0	100.0	

7.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북정책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북정책의 첫 번째 내용은 ‘①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260명(59.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최우선 대북정책 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북한의 비핵화 조치	260	59.1	59.5	59.5
평화협정 체결	92	20.9	21.1	80.5
남북 간 경제협력	37	8.4	8.5	89.0
북한의 개혁 및 개방	24	5.5	5.5	94.5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	12	2.7	2.7	97.3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9	2.0	2.1	99.3
남북 간 문화 및 체육 교류	2	.5	.5	99.8
남북 간 교육협력	1	.2	.2	100.0
합계	437	99.3	100.0	
결측	3	.7		
합계	440	100.0		

그 다음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북정책은 ‘② 평화협정 체결’로 179명(41.1%)인 것으로 나타나, 2024년도의 40.5%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3-10> 최우선 대북정책 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북한의 비핵화 조치	14	3.2	3.2	3.2
평화협정 체결	179	40.7	41.1	44.4
남북 간 경제협력	82	18.6	18.9	63.2
북한의 개혁 및 개방	77	17.5	17.7	80.9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	44	10.0	10.1	91.0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16	3.6	3.7	94.7
남북 간 문화 및 체육 교류	21	4.8	4.8	99.5
남북 간 교육협력	2	.5	.5	100.0
합계	435	98.9	100.0	
결측	5	1.1		
합계	440	100.0		

3번째로 추진되어야 할 대북정책으로 ‘④ 북한의 개혁 및 개방’이 116명(26.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최우선 대북정책 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북한의 비핵화 조치	20	4.5	4.6	4.6
	평화협정 체결	30	6.8	6.8	11.4
	남북 간 경제협력	72	16.4	16.4	27.9
	북한의 개혁 및 개방	116	26.4	26.5	54.3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	57	13.0	13.0	67.4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72	16.4	16.4	83.8
	남북 간 문화 및 체육 교류	45	10.2	10.3	94.1
유효	남북 간 교육협력	26	5.9	5.9	100.0
	합계	438	99.5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5		
합계		440	100.0		

응답자들은 북한에 대한 대북정책으로 먼저 북한의 비핵화이며, 이어서 평화협정 체결, 북한의 개혁 및 개방을 생각하고 있었다.

8. 통일을 위한 선두 주자

통일을 위하여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는 선두 주자에 대하여 ‘① 한국’ 249명 (56.6%)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2번째의 국가는 ‘③ 북한’ 137명(31.3%), 3번째는 ‘③ 미국’ 98명(22.5%)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의 통일을 위한 선두 주자에 대한 결과치인 1번째 한국, 2번째 북한, 3번째 미국의 순서와 비교할 때,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통일을 위한 선두 주자 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한국	249	56.6	56.6	56.6
	미국	47	10.7	10.7	67.3
	북한	126	28.6	28.6	95.9
	중국	4	.9	.9	96.8
	국제사회	6	1.4	1.4	98.2
	한국 국민 개개인	8	1.8	1.8	100.0
합계	440	100.0	100.0		

<표 3-13> 통일을 위한 선두 주자 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한국	93	21.1	21.2	21.2
	미국	128	29.1	29.2	50.5
	북한	137	31.1	31.3	81.7
	중국	35	8.0	8.0	89.7
	일본	2	.5	.5	90.2
	러시아	5	1.1	1.1	91.3
	국제사회	19	4.3	4.3	95.7
	기업	9	2.0	2.1	97.7
	시민단체	3	.7	.7	98.4
	한국 국민 개개인	7	1.6	1.6	100.0
합계	438	99.5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5		
합계	440	100.0			

<표 3-14> 통일을 위한 선두 주자 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한국	45	10.2	10.3	10.3
	미국	98	22.3	22.5	32.9
	북한	80	18.2	18.4	51.3
	중국	53	12.0	12.2	63.4
	일본	4	.9	.9	64.4
	러시아	16	3.6	3.7	68.0
	국제사회	76	17.3	17.5	85.5
	기업	8	1.8	1.8	87.4
	시민 단체	15	3.4	3.4	90.8
	한국 국민 개개인	40	9.1	9.2	100.0
합계	435	98.9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1.1		
합계		440	100.0		

제3장 결론 및 시사점

정권을 장악한 정당의 특성에 따라 대북정책이 크게 달라지는 지금의 현실을 볼 때,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려운 한반도의 정세 속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는 강원도 및 경기도의 대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남북통일 정책’ 및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202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강원도 및 경기도의 대학생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446부의 설문지 가운데 인적사항에 대한 답이 없거나 설문항목에 대하여 불성실한 답을 한 6부를 제외하고, 440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025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문지에 답한 응답자(440명) 가운데 ‘남자’가 261명(59.3%), ‘여자’가 179명(40.7%)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들의 나이는 ① ‘20세 이하’ 35명(8.0%), ② ‘21-30세’ 153명(34.8%), ③ ‘31-40세’ 37명(8.4%), ④ ‘41-50세’ 66명(15.0%), ⑤ ‘51-60세’ 69명(15.7%), ⑥ ‘61세 이상’ 80명(18.2%)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① ‘대학 1학년’ 37명(8.4%), ② ‘대학 2학년’ 71명(16.1%), ③ ‘대학 3학년’ 44명(10.0%), ④ ‘대학 4학년’ 27명(6.1%), ⑤ ‘일반인’ 261명(59.3%)으로 나타났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① ‘반드시 통일돼야 한다’ 115명(26.1%), ② ‘조금 필요하다’ 87명(19.8%), ③ ‘보통이다’ 90명(20.5%), ④ ‘아직 시기상조다’ 111명(25.2%), ⑤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37명(8.4%)으로 나타났으며, 설문에 답한 응답자들의 63.4%가 통일이 대한민국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57.8%가 남북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북통일의 시기적인 전망에 대하여 남북통일이 불가능하거나 늦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의 비중이 89.5%로 높게 나타났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관계는 ① ‘한미 간 협력’ 105명(24.0%), ② ‘북미 간 협력’ 9명(2.1%), ③ ‘한중 간 협력’ 29명(6.6%), ④ ‘한일 간 협력’ 2명(0.5%), ⑤ ‘한미일 간 협력’ 89명(20.3%), ⑥ ‘한미북 간 협력’ 204명(46.6%)으로 나타났으며,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부의 대북정책으로는 정부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조치가 우선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5.5%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며, 2024년의 결과치 53.0%와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1차적으로는 ‘①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다’가 308명(70.6%)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29.9%는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결과치는 2024년의 결과치인 29.1%와 비교하면, 비슷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86.8%로 나타났으며, 북핵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6.1%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북핵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을 위하여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는 선두 주자에 대하여 ‘① 한국’ 249명(56.6%)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2번째의 국가는 ‘③ 북한’ 137명(31.3%), 3번째는 ‘③ 미국’ 98명(2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그동안의 북한 동향을 분석해 보면, 북한의 대남정책은 호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설문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국민들의 남북통일에 대한 인식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